

유성엽 “전북 교육·문화예산 215.5억”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가상현실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등

7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국민의당, 정음·고창)은 국회에서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전북의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예산 215.5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이 확보한 예산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 88.72억 원 ▲전북대 시설·설비 보수 10억 원 및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20억 원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9억 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5억 원 ▲전주 서고사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13억 원 ▲완주 경천 자연공감산수인마을 2.5억 원 ▲가상현실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64.28억 원 ▲순창 일광사 대응전 개축 2억 원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 지원 1억 원 등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인해 건립에 차질을 빚어왔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를 국가사업으로 다시 환원시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정부를 압박해 왔고,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운동혁명 기념공원을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끌어내면서 법률 상에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20%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은 국민의당 당원으로 정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강고한 입장을 막판까지 견지하면서 정부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국비 88.72억



에너지제로 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노원구 에너지제로 주택 마을회관에서 입주민들과 환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됐다. 교육 예산 확보에도 유 위원장이 적극 나섰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는 지난해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남이 검출되면서 우레탄 트랙 교체가 시급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우레탄교체와 폐기를 처리가 가능해진다. 내년도 예산안에 1억 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던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사업에도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가상현실(VR)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 사업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실내체육시설을 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전북의 각 지역에도 시설이 보급된다. 유 위원장은 이번에 지역 유립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과 명상체험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사업비를 모두 확보했다. 아울러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과 완주 경천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사업비도 확보해 미래 먹거리 관광·콘텐츠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유성엽 위원장은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영일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고용안정 필요”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정책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김규태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최영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창)은 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당장 어렵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등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방채는 지나치게 발행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효은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주)은 전라북도에서 11월 17일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황당하다는 언론보도를 낸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대응이었다고 질책했다.

양성빈 위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시군별로 특수학교 편차가 심하며,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의 경우 특수학교는 지나치게 적고 멀어서 해당 지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부권 등 특수학교가 적어 교육 형평성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시군의 특수학생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드시 의견을 듣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남주 위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북교육청은 매년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육부의 평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민중당 비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기존에는 효율성만을 고려했지만, 이제 사람 중심의 근로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국가예산 1조 103억... 김관영 의원 활약

군산시 국가예산 3년 연속 1조원 시대가 개막된다. 1조 103억에 달하는 군산시 사상 최대 국비예산 확보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14%에 달하는 1,239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터’의 캐스팅 보터’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정치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510억 원, 신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 신규) △군대항만역사관 건립(1억 원, 신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1,150억원)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867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2,044 억원)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270억원) 등이다.

새만금 관계 예산이 대거 증액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배후 군산시에는 낙수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산국회 막판 진통의 원인 중 하나였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의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관계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정기국회 종료 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개발청 설립 및 현장 이전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공사는 후에 새만금개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이라며 “관계 법 개정안까지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3년 연속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은 모두 군산시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2018년은 우리 군산이 불 켜진 항구도시·전북경제수도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CCTV 등 특교세 7.6억 확보

황등면 하동마을과 동연지하차도 간 통행로의 확보를 위해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확포장공사가 확정된 곳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우범지역의 CCTV설치도 주민들께서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상당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재개발 건설사가 금품 제공시 2년간 입찰 제한’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천만원대 이사비 등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당 정동영 의원은 7일, “천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현행법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 입찰자격 제한이나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없어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지적하고 “이에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사에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고, 수천만

원대 무상 이사비 지급과 수억원대 이주비 무이자 대출이 재건축 분양가를 상승시키며, 금품 살포에 해당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회에서도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하며,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 제안 및 자금 용자의 시중금리 이하 중개 알선을 포함 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 지원을 원천 차단시킨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업자 등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으로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고,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동영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과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 소비지”라 지적하고 “건설사의 금품 제공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 무주택자의 내집 장만 부담을 가중시키며, 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